

광양제철 30년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8주에 한번꼴 점검 때 배출...영산강환경청 행정처분 사전 통지 광양제철 "기술 한계상 불가피"...지역시민단체 즉각 중단 촉구

노동자·주민 건강 영향조사 요구도

포스코 광양제철이 30여 년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무단 배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광양제철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광양제철측이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환경청)과 전남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기 고로(용광로)가 처음 가동에 들어간 1987년 이래 30년이 넘도록 고로정비 과정

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별도로 조치 없이 무단 배출하고 있다. 광양제철의 고로는 현재 총 5기로, 각 고로별로 8주에 한번씩 24시간 동안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지난 2월 접수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무단 배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배출시설(굴뚝)의 높이가 110m에 달하고 배출가스의 온도가 300도가 넘는 고온이어서 정확한 배출 물질과 양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의 이 같은 환경오염 행태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영산강환경청도

같은 법 제38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광양제철측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광양제철측은 8주에 한 차례 시행하는 고로 안전점검 과정에서 기술 한계상 1시간 가량 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을 하려면 용광로의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이때는 정화장치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를 여과 없이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제철측은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2에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가시 배출관' (용광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관)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점검을 할 때 까지 배출관(고로 1기당 4

개씩 총 20개)을 통해 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과정이 화재나 폭발에 준하는 '이상 상황'이라는 게 광양제철의 주장이다.

전남도와 영산강환경청은 광양제철의 주장에 따라 환경부에 '이상 상황'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질의한 상태로, 환경부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양만녹색연합 관계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면서 "점검 과정 중 유독물질 무단 배출행위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 즉시 중단해야 하며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 영향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관"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점검을 할 때 까지 배출관(고로 1기당 4

지적장애 조카 올린 '못된 부부'

남편은 성폭행...부인은 범행 숨기려 이웃주민 허위신고

경찰이 지적장애 조카를 성폭행한 남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웃주민을 성폭행범으로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을 수사하고 있다.

3일 전남경찰청과 곡성경찰 등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고모인 A(56)씨에 대한 무고와 위증, 강요, 협박 등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자신의 조카 B(여·22)씨가 이웃주민 C(59)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C씨가 지난 2014~2015년 사이 조카를 모텔과 원룸 등으로 끌고가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조카의 진술, C씨의 차량주행 기록 및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등을 토대로 C씨를 성폭행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C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조카를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C씨를 구속

기소했다. C씨는 결국 지난 2017년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C씨의 딸 등은 아버지의 무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폭행을 주장해온 B씨 등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같은 해 9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B씨는 "A씨가 아닌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고모 집에서 거주하며 고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고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 센터나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같은 건물에 살던 C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C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났으며,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을 받는 등 고소장을 토대로 무고, 무고교사, 위증, 강요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부실수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조카를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C씨를 구속

고흥군 수역 들여 산 윤봉길의사 유목 '가짜'

전임 군수 시절 구입

고흥군이 박병중 전 군수 시절 사들인 윤봉길 의사의 유목(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이 가짜로 판명됐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2015년 11월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산 윤봉길 의사의 유목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 감정평가 결과 가짜로 판명됐다.

고흥군은 전임군수 시절인 2015년 11월 25일 유목 매도자 이모씨와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선생 등 항일 애국지사 6인의 글씨, 족자, 사문, 서첩 등 6점을 10억원에 유목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으로 4억원을 지급한 고흥군은 잔금 6억원을 2017년 3월까지 나눠 지불하기로 했다.

유목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위작 시비와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고흥군은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목을 판 이씨는 2016년 10월 광주지법에 유목 매도대금을 지불하라며 정

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흥군은 6점의 유목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재판부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유목감정 전문가 3명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윤봉길 유목 1점은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유목 5점도 2명은 가짜로 판정했고 1명은 진짜로 판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지난해 11월 16일 매매대금 지불 청구소송에서 "윤봉길 의사 유목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흥군에 요구한 매매대금 6억원 중의 1억3000만원만 인정하고 고흥군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고흥군은 "나머지 유목도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고흥군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유목 판매 계약금으로 줬던 4억원도 돌려달라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흥=주지중 기자 gjuu@kwangju.co.kr



클린 북구 만들어요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자생단체회원, 주민들이 신용동 일대 빗고울로 완충지대에서 새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북구는 이날을 클린북구의 날로 정하고 기관, 단체, 공무원, 자생단체 등이 주요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지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금품제공 의혹 고흥 두원농협 조합장 취임 10일만에 사퇴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고흥군 두원농협 조합장이 취임 10여일 만에 사퇴했다.

3일 고흥군 두원농협 등에 따르면 A조합장이 지난 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A조합장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

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일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합장이 사퇴함에 따라 두원농협은 오는 30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낙태죄 위헌 판단 나올까... 11일 현재 선고 주목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현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오는 1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선고기일에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현재의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사건은 2013년 동의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남석 현재소장을 비롯한 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6기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연남뉴스

아버지 동거녀 집에서 정수기 물통에 있는 300만원 훔친 20대

○...아버지의 동거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동거녀 딸이 정수기 물통(20ℓ)에 모아놓은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간 20대가 경찰서행.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0)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5시10분께 아버지와 동거녀가 살고있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동거녀의 딸 이모(25)씨가 정수기물통에 모은

300만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훔쳐 달아나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김씨의 아버지와 동거녀, 딸은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홀로 살면서 신용카드대금을 못낼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듯하다"면서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진 출석해 반성하고 있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